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소원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 발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 보고를 하고 있다.

# 與 “단순 실언” VS 野 “헌법 유린”

## 국회 ‘강만수 현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 착수

국회는 12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13일)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본격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합동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이날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하철용 현재 사무처장을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받고 행정부의 부당한 사법권 간섭이 존재했는지를 추궁했다.

한나라당이 강 장관의 국회 발언이 단순한 ‘실언’에 불과한데도 야권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은 강 장관의 발언으로 ‘헌법유린’ 사태가 드러났으며 해임을 촉구하고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 각사인 이춘석 의원은 질의에서 “재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는 개편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가 두달만에 철회하는 견해를 현재에 전달했다”며 “바뀐 입장을 전달하려면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세계실장이 직접 방문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재정부가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총 6회의 의견서는 모두 서면이었는데 최종결정일을 앞둔

지난 10월에는 세계실장이 직접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또 “강 장관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세특별 합산은 위헌으로 같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는데 현재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게 아닌가”라며 정부와 현재의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재정부에서 10월22일 종부세관련 수정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설명을 위해 유남석 수석헌법연구관을 면담했지만 현재 결정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면 현재법 74조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헌법소원의 경우 과거에도 관련자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강만수 장관의 굴욕

### “현재 잘 몰라서...부끄럽다” 사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자신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현재에 대한 식견이 없어 그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강만수 현재 접촉 진상조사위’에 출석, “현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실무접촉 자체도 ‘현재에 의견을 잘 제출하고 잘 설명하라’는 한마디 말고는 진후에 지시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해 현재에 대해 많은 걱정을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재정부는 현재 재판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현재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재정부 세계실장 등 실무자가 현재를 방문해 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위헌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재정부장관을 포함한 어떤 정부관계자도 어떤 형태로든 재판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었고, ‘일부 위험’ 예상 발언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주임재판관 면담’ 발언은 “세계실장이 주임재판관이 아니라 수석헌법연구관과 면담한 것으로 정정했다”고, ‘현재의 방문 요청’ 발언은 “현재가 요



청한게 아니라 세계실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각각 해명했다.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순리에 맞지 않고 너무나 과도한 세금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재정위 ‘부자 감세·재정 건전성’ 날선 공방

### 與 “경제위기 극복 위해 재정지출·감세 동시 확대 필수” 野 “부유층에게만 혜택...감세 줄여 재정 적자폭 낮춰야”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의 동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정부측 입장을 적극 변호했지만 민주당은 대규모 감세가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재

정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한가하게 논란을 벌일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감세 내용도 대부분 서민층과 중산층에 집중돼 있는데 자꾸 부자나 워니 하면서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제발 하지 말자”고 말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최소한 감세에는 동의하지만 지급처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은 곤란하다”며 “감세를 줄여 재정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부자 감세를 서민과 중산층 위주의 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인세는 대기업, 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는 감세 효과를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도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나성린 의원은 “내년도 재정건전성 악화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률 의원은 “내년 경기침체가 변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까지 단행하면 재정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국토부, 지방발전 연구용역 예산 0원”

### 한나라 정희수 의원...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20억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2일 “국토해양부는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의 계획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으

로 15억1천700만원을 편성해 11억9천1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에도 후속 연구비로 4억5천만원을 배정했다”며 “하지만 지방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 사업에 따른 연구용역 예산으로 2006년 9천700만원, 2007년 8억9천800만원, 올해 5억2천2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연합뉴스

## ‘공천 현금’ 서청원 항소심도 실행

### 양정례·김노식 의원도...대법원 확정 땀 의원직 상실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천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가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

에 채무 해결과 선거 비용 등 수십억원의 자금이 필요했던 점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전권을 위임받은 서 대표가 특별 담비를 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공식 발언한 점, 사건 초기에는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 대표가 양 의원을 만날 때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결정했고 국회의원에 강한 미련이 있었던 김 의원도 그럴만한 이해관계가 있어 1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친박연대의 ‘공천현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의 모친이 친박연대에 건넨 17억 원 중 1심이 무죄 판결했던 2억 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으며 김 의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 민주 당원 실력 저지

### 김민석 최고 구인 실패

검찰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의 집행을 시도했으나 당원들의 실력 저지로 실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수사관 5명을 민주당사에 보내 김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할 것을 고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당사 정문 앞에서부터 완강히 막아서자 오후 4시에 철수했다.

검찰은 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김 최고위원과의 대면 접촉이나 직접 통화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 사무처 당직자와 영등포 지역 당원 100여명은 검찰의 구인장 집행 방침이 정해진 이날 오전 속속 당사로 모여들어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김 최고위원을 방어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는 등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피의자인 김 최고위원의 출석 없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험생 여러분  
"공부" is your best friend.

www.kwangju.ac.kr

광주대학교 입학처  
02-220-1111

아이세라  
www.aisera.com